



한·중·일 경제협약체 구상

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
동아시아협력팀 선임연구위원
cjlee@kiep.go.kr

방호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
동아시아협력팀 전문연구위원
bassgu@kiep.go.kr

나승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
동아시아협력팀 전문연구위원
skna@kiep.go.kr

이보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
동아시아협력팀 연구원
brlee@kiep.go.kr



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- 전 세계적으로 지역적 경제통합 및 지역협력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통합 제도화의 속도와 수준은 유럽(EU)과 북미(NAFTA) 지역 대비 미흡
- 그러나 2012년 11월 동아시아 16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협상 개시에 합의하였으며, 한·중·일 3국 또한 한·중·일 FTA 협상 개시를 선언
- 이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경제통합의 궁극적 지향점인 동북아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경제공동체 실현의 첫 단계가 될 것으로 기대
-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동북아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장기 목표로 한·중·일 경제협약체 구상을 제시하고자 함.
 -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한·중·일 3국 경제가 어느 정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, 또한 3국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차원의 대화채널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3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

2. 조사 및 분석 결과

- 한·중·일 3국 경제의 세계경제 위상 및 상호의존도
 - 한·중·일 3국의 경제적 위상은 중국경제의 빠른 부상으로 인해 증가하였으며, 3국간 경제적 상호의존도도 다양한 부문에서 심화
 - 역내 교역비중은 1990~2011년 동안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이나 EU 및 NAFTA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
 - 제조업: 철강(선철 및 조강), 자동차, 조선업(화물선), 전자부품(IT 품목), 섬유(방직용 섬유재료제) 등이 전세계 생산량의 40% 이상 혹은 전세계 수출의 80% 이상을 차지하였으며, 전자기기 및 비전자기기 분야에서의 상호의존도가 높음
 - 에너지환경, 관광, 문화: 3국간 상호 의존도 증가세

- 금융: 역내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통화스왑 추진
- 교통물류: 3국의 세계 점유비중이 높아짐
- 농수산업: 3국의 수출에서 역내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나, 역내총수출에서 농업 및 수산업이 차지하는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

● **한·중·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관련 대화채널은 지속적으로 확대, 발전되어 왔으나, 아직 추가적인 보강 및 체계화 필요**

- 3국 간 정상회의의 경우, 1999년 11월 아세안+3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번째 한·중·일 3국 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이래 2005년을 제외하고 매년 정상회의 개최
 - 특히 2008년 12월부터는 아세안+3 체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정상회의가 개최되며 3국 간 협력체제 강화
- 3국 간 장관급회의의 경우, 제1차 정상회의 개최(1999년) 당시 환경장관회의 1개에서 2012년 12월 현재 총 18개로 확대, 이 중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는 13개 개최
 - 외교, 경제통상, 환경, 재무, 문화, 농업, 보건장관회의와 특허청장회의는 매년 개최
 - 과학기술, 교통물류, 관광장관회의와 관세청장회의는 격년제로 개최
 - 정보통신장관회의는 연례화에 합의된 바 있으나 2006년 제4차 회의 이후 비정기 개최
- 장관급회의의 경우,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제외하고는 사전 의제협의 또는 3국 간 협력과제 이행 및 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
 - 한편 한·중·일 국장급 표준협의체는 장관급회의가 부재한 가운데 개최되고 있음.
- 한·중·일 3국은 2010년 3국 정상회의의 합의에 기초하여 2011년 9월 3국 협력 사무국 정식 출범
 - 사무국은 협력사업 평가 및 연간 실적보고서 정리, 3국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지원 등을 통해 3국간 협력 관계 심화에 기여하는 역할 수행

● **한·중·일 지자체, 업계 및 여타 경제협력 대화채널**

- 3국 지자체 간 교류협력사례로는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,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, 한·중·일 지방정부교류회의 등이 있으며, 양자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수도 한·중 484건, 한·일 174건에 달함.
 - 특히 동북아 지역 자치단체연합과 같은 다자협의기구의 경우는 경제통상, 환경, 문화관광 등 전문 분과 위원회를 두어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
 - 지자체 간 교류협력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직접적 성과보다는 인적교류 등 상호 네트워크 구축 자체에 목적을 두고 추진
 - 각 지역별로 특화된 의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
- 업계 차원에서의 3국 간 교류협력 또한 한·중·일 Business Summit을 비롯하여, 업종별 협회별로 진행

- 다만, Business Summit 외의 여타 업계 간 교류협력은 3자간보다는 일반적으로 한·중, 한·일 등 양자 간 교류가 활발
-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산업, 관광·문화 부문 등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
 - 시장정보 공유 및 투자관련 협력(전시회 등), 환경, 인적교류 등에 집중
 - 협회 및 기업 차원에서 교류협력은 주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이들 교류협력과 업계 대표회의라 할 수 있는 Business Summit과의 상호 연계성 미흡
- 정부(중앙 및 지방정부), 업계,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혼합형 교류협력의 경우 대부분 정부 차원에서 합의 및 추진된 사업에 업계 또는 학계에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
 - 한·중·일 FTA 공동연구, 동북아 표준협력포럼, 환황해 경제·기술 교류회의, 한·일경제교류회의의 등이 있으며 3자 간 협력보다는 한·일 간을 중심으로 한 양자간 교류가 보다 활발

3. 정책 제언

1) 한·중·일 경제협의체의 특성 및 기대효과

(1) 특성

- 한·중·일 경제협의체는 동북아 3국 간 다양한 경제분야에서 협의를 통해 3국 간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3국 경제의 지속된 성장과 번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APEC이나 아세안+3 협력체제와 아세안에서의 경제분야 협력체와 유사
- 그러나 한·중·일 경제협의체는 여러 면에서 이들 경제협력체와 구별
 - 지리적으로 아·태지역이나 동아시아가 아닌 동북아에 국한되어 있으며, 회원국 수도 이들 협력체에 비해 훨씬 적다는 점
 - 한·중·일 3국은 지리적 인접성 외에도 다수의 공통점을 지님
 - 비록 경제발전단계 면에서 한·중·일 3국 간 격차가 존재하나 그 차이가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며,
 - 3국 모두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분야의 강국이나, 동시에 서비스 부문에서는 3국 모두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고
 - 농수산업의 국제경쟁력도 상대적으로 낮으며, 에너지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준임.
 - 더욱이 3국은 한자문화를 비롯해 문화적으로도 공유하는 부문이 많아, 3국이 관심을 갖고 협력을 모색할 분야가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할 가능성이 높음.
 - 3국 간 FTA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미 3국 경제간 상호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.
 - 한·중·일 3국의 세계경제에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, 한·중·일 경제협의체는 그 영향이 3국 의

에도 동아시아나 아·태지역 나아가 세계경제 차원에서도 미칠 수 있을 것임.

- 한·중·일 경제협의체는 정상회의를 비롯해 상당수의 장관급회의와 고위관리 및 실무급회의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상태임. 따라서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이들 대화채널을 보완하고 체계화함으로써 한·중·일 경제협의체를 결성할 수 있음.

(2) 기대효과

● 지역 차원의 경제통합에 기여

- 아직까지 역내국가간 양자간 FTA조차 없는 상태이고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영토분쟁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 등이 상존하고 때로는 정치·안보적 갈등도 표출되고 있는 상황
- 동아시아와는 달리 동북아시아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지역무역협정을 포함하는 공동체보다 낮은 단계인 경제협의체 정도가 상당기간 동안 실현가능한 목표

● 경제적 편익

- 한·중·일 경제협의체는 분산되어 추진되어 왔던 3국 정부부처 간의 대화채널을 강화하고 새로이 요구되는 채널을 보장하며 이를 체계화함으로써, 3국 간 경제협력이 보다 긴밀해지고 그 수준 또한 제고
- 이와 같은 3국 간 경제교류 및 협력의 증대는 결국 3국 모두의 경제성장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나아가 세계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● 경제 외적 파급효과

- 한·중·일 경제협의체는 정부관리를 비롯한 3국 간 인적 유대를 강화
- 한·중·일 경제협의체는 3국 간 상호이해 증진과 신뢰구축을 가져와 3국 간 포괄적 관계개선을 초래할 것으로 기대
- 한·중·일 경제협의체는 동아시아와 아·태지역 차원 협력뿐만 아니라, 다자간 국제경제기구 및 국제경제포럼에서 3국의 발언권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할 것

● 정치적 리더십 강화

- 한·중·일 경제협의체가 출범할 경우, 이는 일차적으로 3국 간 정상회의의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한·중·일 정상회의의 위상 제고를 가져올 것이고, 이는 지역 차원에서 정치적 리더십 강화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
- 그리고 강화된 정치적 리더십은 지역 차원의 경제통합에 중요한 긍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, 아울러 과거사 문제 및 영토분쟁 등으로 인한 역내 갈등 및 긴장관계의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

2) 한·중·일 경제협의체의 단계적 추진방안

- 일차적으로 한·중·일 정상회의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고, 이를 토대로 3국 정상의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한·중·일 경제협의체 설립을 이룩하는 단계적 추진방안을 제안

(1) 제1단계: 한·중·일 정상회의 체계의 공고화

- 우선 매년 개최되는 장관회의를 새로이 출범한 정상회의와 개최장소, 의장국 및 개최시기 면에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
 - 장관회의가 정상회의와 연계되어 체계적으로 운영될 경우, 효과적으로 정상회의를 지원할 수 있고 또한 정상회의의 지침이 장관회의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
- 현 시점에서 이전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협력과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한편, 3국 협력사무국으로 하여금 매년 합의된 협력과제의 수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
 -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협력과제가 이행되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등 새로운 협력사업의 제안에 못지않게 이전에 합의된 협력과제의 이행에 대한 점검에 주력
- 업계의 의견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현 Business Summit에서 각국의 업계 대표가 업종별 협회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업계 전체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분야별 장관회의나 고위관리회의에서도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조성될 필요
- 에너지, 정보통신을 비롯한 주요 산업별 장관급회의가 3국 중 일국의 정부조직 개편이나 3국 정부조직의 비대칭성 때문에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정상회의 차원의 검토 필요

(2) 제2단계: 한·중·일 경제협의체 구성

- 한·중·일 경제협의체 구축은 결국 체계화된 한·중·일 정상회의에서의 결정에 의해 실현될 것
 - 제1단계에서 현재 한·중·일 3국 간 운영되고 있는 대화채널을 보완하고 정상회의와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화함으로써 한·중·일 정상회의의 효과성 및 위상 제고
 - 이를 토대로 한·중·일 경제협의체를 결성하는 것은 3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음.

3) 주요 추진과제

- 한·중·일 3국이 경제적 경쟁관계 및 일부 경제 외적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3국이 협력해야 한다는

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3국 정치인 및 일반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

- 동아시아경제공동체 건설에 3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도 한·중·일 경제협약체가 필요
- 한·중·일 3국은 동북아 차원에서의 경제협력 증진에도 주력해야 하며,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3국 간 경제협약체가 필요하다는 점도 홍보

- 한·중·일 경제협약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·중·일 3국 간 경제통합 관련 심층적이며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

- 이를 위해서는 2001년부터 시작되어 온 한·중·일 3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재정비해 추진
- 3국의 연구진이 참여하는 동북아 경제통합 관련 특화된 연구기관의 설립도 추진되어야 할 필요
- 또한 민간 차원에서 동북아재단과 같은 조직을 통해 동북아 경제통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필요

- 한·중·일 3국 모두에게 다양한 혜택이 되는 한·중·일 경제협약체는 여타 지역 차원의 경제협력체에 비해 훨씬 용이하게 결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3국의 정치인, 관료, 기업인 및 국민들이 인식토록 해야 할 것

